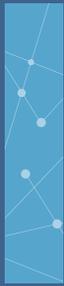


Policy



ISSUE

2018  
정책이슈리포트

저출산 정책분석 및  
광역·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방안



REPORT

REPORT

# 저출산 정책분석 및 광역·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방안

## 연구진

박 승 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 영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CONTENTS

<b>I ) 전라북도 인구현황</b> .....	<b>01</b>
① 인구변화 .....	01
② 출산 및 출생아수 현황 .....	04
③ 혼인 .....	07
④ 출산의 기회비용 .....	09
⑤ 사망 .....	12
⑥ 인구이동 .....	13
⑦ 지역고령화 변화 .....	14
⑧ 시사점 .....	16
<b>II ) 우수사례 검토</b> .....	<b>20</b>
① 국내사례 .....	20
② 해외사례 .....	28
③ 시사점 .....	37

Ⅲ) 전라북도 사업 검토 ..... 39

①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 39

② 전북 저출산 기본계획 ..... 44

③ 전북 저출산 관련 사업 ..... 49

④ 관련계획 종합 ..... 54

Ⅳ) 저출산 방향 검토 및 사업 방향 ..... 56

① 저출산 방향성 정립 ..... 56

② 사업 예시 ..... 58

③ 도/기초/유관기관 협력방안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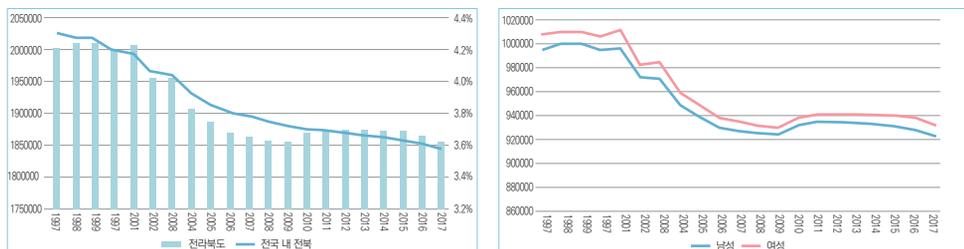
# I 전라북도 인구현황

## 1 인구 변화

### 인구 변화

- 전라북도의 인구는 1997년 2,001,606명 2007년 1,862,277명, 2017년 1,854,607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내 전라북도의 인구비중은 1997년 4.3%, 2007년 3.8%, 2017년 3.6%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북도 인구나 전국 내 전라북도의 인구 비중이 감소함
  - 1997년 대비 2017년 전라북도의 인구는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남성인구는 1997년 994,897명, 2007년 927,367명, 2017년 922,307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인구는 1997년 1,006,709명, 2007년 934,910명, 2017년 932,300명으로 나타남
  - 1997년 대비 2017년 전라북도의 남성인구는 -7.3%, 여성인구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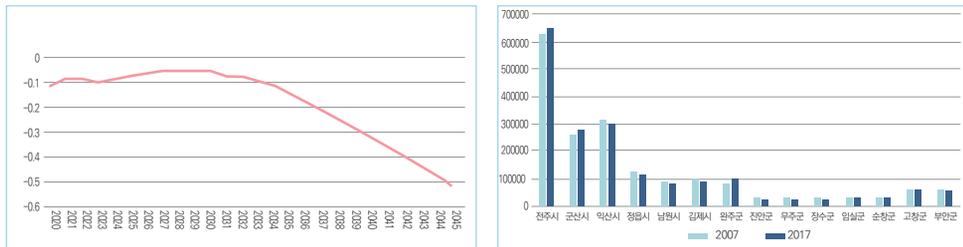
Ⅰ 총 인구 및 성별 인구 변화 Ⅰ



## 인구성장률 및 시군별 인구변화

- 전라북도의 인구성장률은 2020년 -0.12%부터 지속적으로 음의 성장률을 보이며, 203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45년에 -0.51%를 기록함
- 2017년 전북의 시군별 인구는 전주시가 648,9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익산시 300,187명, 군산시 274,99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장수군 23,003명, 무주군 24,809명, 진안군 26,271명으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7년 전북의 시군 중 완주군이 15.7% 증가함으로써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산시 5.5%, 전주시 4.0%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장수군은 -13.8% 감소함으로써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진안군 -13.2%, 김제시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I 인구성장률(2020-2045) 및 시군별 인구변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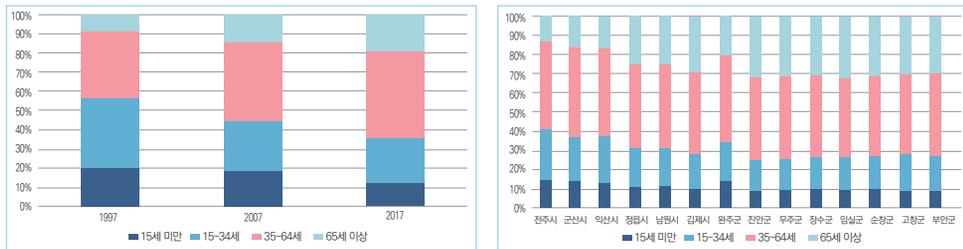
## 전북/시군별 연령별 인구

- 2017년 전라북도 15세 미만 인구는 237,193명(12.8%), 15-34세 428,157명(23.1%), 35-64세 837,975명(45.2%), 65세 이상 351,282명(18.9%)로 나타남
  - 1997년 대비 2017년 전라북도의 인구 비중은 15세 미만 -7.7%p, 15-34세 -12.5%p 감소하였으며, 35-64세 10.4%p, 65세 이상 9.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전북 시군별 연령별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 14.3%, 완주군 14.0%로 나타났고, 15-3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

26.8%, 익산시 24.8%로 나타났으며, 35-6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산시 47.1%, 전주시 45.8%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 32.1%, 진안군 31.6%로 나타남

- 반면, 2017년 전북 시군별 연령별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안군 8.9%, 고창군 9.0%로 나타났고, 15-3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진안군과 무주군 15.9%로 나타났으며, 35-6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임실군과 순창군 41.6%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 13.1%, 군산시 1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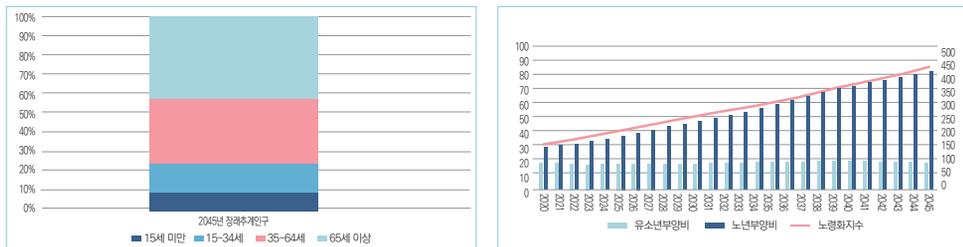
### Ⅰ 전북/시군별 연령별 인구 Ⅰ



### 🔗 장래추계 인구,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2045년 전북의 장래추계 연령별 인구는 15세 미만 163,046명(9.4%), 15-34세 253,888명(14.6%), 35세-64세 592,865명(34.1%), 65세 이상 인구 729,690명(41.9%)으로 추계됨
- 2020년 전라북도의 유소년부양비는 18.2에서 2045년 19.3으로 약 6.0%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동 기간 노년부양비는 30.3에서 86.2로 약 184.5% 증가, 노령화지수는 166에서 447.5로 169.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Ⅰ 연령별 인구 장래추계와 유소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Ⅰ



## 2 출산 및 출생아수 현황

### ④ 합계출산율 추이(2007-2017)

-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은 2007년의 여성 한명당 1.38명으로 전국 평균 1.259명, 강원도 1.356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7년 여성 한명당 1.151명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052명, 강원도 1.123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전북의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순창군이 1.79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안군 1.625명, 임실군 1.581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2017년 전북의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고창군이 1.044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전주시 1.054명, 정읍시 1.125명으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7년 전북의 시군 중 순창군의 합계출산율이 5.0% 증가함으로써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주군은 -35.6% 감소함으로써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7년 전북의 시군 중 순창군과 부안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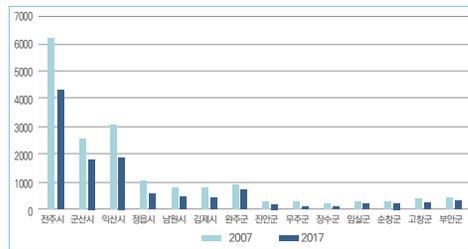
### Ⅰ 전체 및 시군별 합계출산율 추이 Ⅰ



## 시군별 출생건수 및 전체/시군 연령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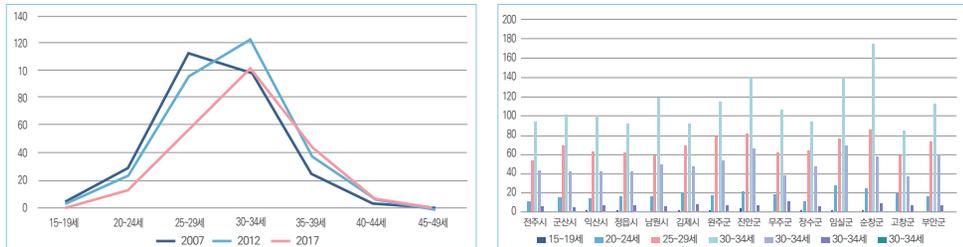
- 2017년 전북 시군별 출생건수는 전주시가 4,29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익산시 1,874명, 군산시 1,799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장수군은 출생건수가 98명으로 전북 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주군 104명, 진안군 155명 등으로 나타남

### 시군별 출생건수



- 2007년 대비 2017년 전북 시군 중 순창군과 완주군의 출생건수가 각각 -21.5%, -22.3% 감소함으로써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무주군과 장수군의 출생건수가 각각 -54.8%, -50.8% 감소함으로써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남
- 2007년도 이후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의 출산 시기는 20대에서 30대로 늦춰졌으며, 2007년 20대 후반 출산율은 여성 천명당 112.4명에서 2017년 61.4명으로 하락한 반면, 30대 초반 출산율은 98.7명에서 100.7명으로 증가
- 2017년 전북의 시군별 연령별 출산율은 전 지역에서 30대 초반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초반 출산율은 임실군이 여성 천명당 26.8명, 20대 후반 출산율은 순창군 85.9명, 30대 초반 출산율은 순창군 175.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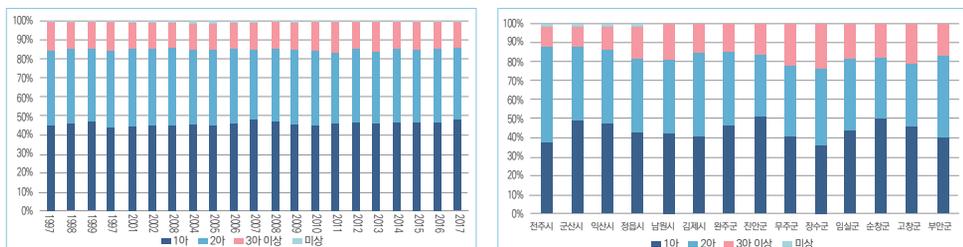
### Ⅰ 시군별 전체/시군 연령별 출산율 Ⅰ



### 🔗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변화

- 출생순위별로 전라북도 출생아 중 첫째아의 비중은 1997년 44.9%에서 2017년 47.5%로 소폭 증가하였고, 둘째아의 비율은 1997년 39.4%에서 38.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시군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은 진안군과 전주시의 첫째아 비중이 각각 51.0%, 5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수군과 부안군은 각각 35.7%, 40.0%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전북의 시군별 출생아 비율 중 셋째아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장수군과 무주군으로 각각 23.5%, 23.1%로 나타난 반면, 군산시와 전주시의 셋째아 이상 비중은 각각 11.3%, 11.6%로 나타나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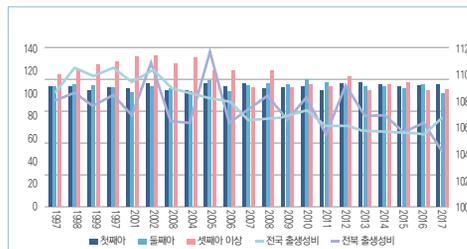
### Ⅰ 전체 및 시군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변화(1997-2017) Ⅰ



### 출생순위별 출생성비(여아 백명당)

- 전라북도의 출생성비는 1997년 여아 백명당 107.6명에서 2002년 110.5명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7년 103.8명으로 하락
  - 특히,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997년 115.9명에서 2002년 132.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7년 103.5명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출생성비는 1997년에는 전국 출생성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전국 평균 106.3명, 전라북도 103.8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출생순위별 출생성비(1997~2017)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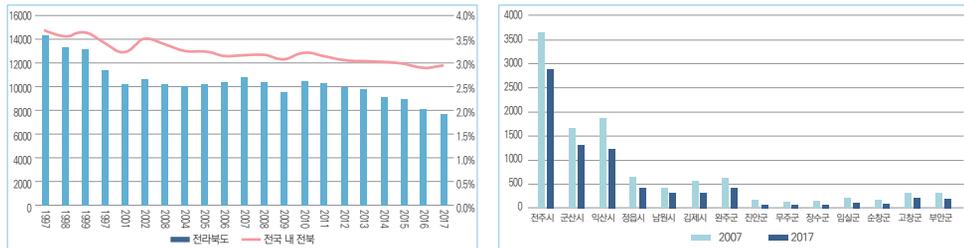
## 3 혼인

### 혼인건수 추이

- 1997년 전라북도의 혼인건수는 14,357건에서 2017년 7,817건으로 감소하여 1997년 대비 2017년 -4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내 전라북도의 혼인건수는 1997년 3.7%에서 2017년 3.0%로 -7.0%p가 하락
- 2017년 전라북도의 시군별 혼인건수는 전주시가 2,9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군산시 1,322건, 익산시 1,246건 순으로 나타난 반면, 무주군은 73건으로 전라북도의 시군 중 혼인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7년 전라북도의 혼인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와 전주시가 각각 -20.2%, -20.3% 감소하며 가장 감소폭이 적었으며, 진안군, 장수군은 각각 -51.3%, -48.1% 감소함으로써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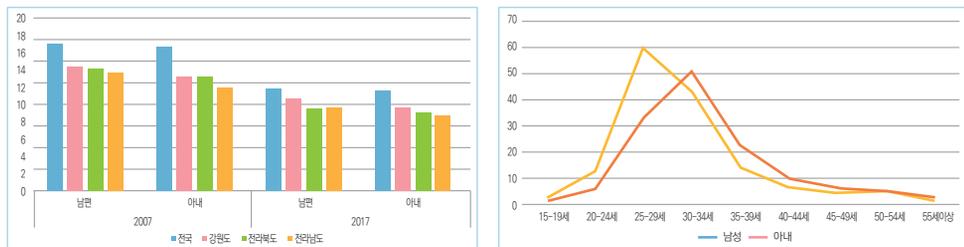
### I 혼인건수 추이(1997~2017) I



### 혼인율

- 2017년 전라북도의 혼인율(천명당)을 살펴보면 남성 9.8명, 여성 9.1명으로 전국 남성 12명, 여성 11.8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대비 2017년 전라북도의 혼인율은 남성 -31.9%, 여성 -3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남성 -30.2%, 여성 -30.2%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전라북도의 연령별 혼인율은 20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는 남성 혼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 연령별 혼인율(2017) I



## 초혼 연령

- 전라북도의 초혼 연령은 2007년 남성 30.96세, 여성 27.67세로 전국 평균 남성 31.11세, 여성 28.09세보다 낮게 나타남
- 2017년 전라북도의 초혼 연령은 남성 32.77세, 여성 29.72세로 지난 10년 간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 연령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전라북도 시군별 남성 초혼 연령은 진안군과 무주군이 각각 34.73세, 34.37세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초혼 연령은 부안군과 장수군이 각각 30.98세, 30.73세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 초혼 연령은 익산시와 전주시가 각각 32.17세, 32.43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초혼 연령은 임실군과 정읍시가 각각 28.38세, 29.18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초혼 연령(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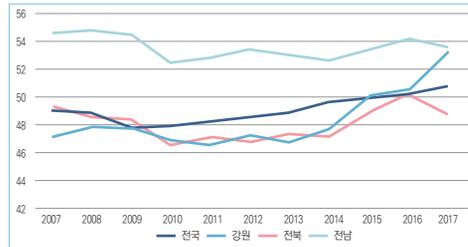
## 4 출산의 기회비용

### 여성 고용률 추이

- 전라북도 여성 고용률은 2007년 49.3%에서 2010년 46.6%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2016년 50.2%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2017년 48.8%로 하락
  - 전라북도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 여성 고용률이 완만하게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또한,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 전라남도예 비해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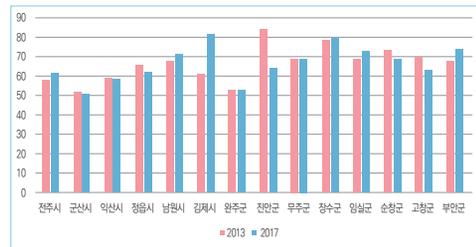
### I 여성 고용률 추이 I



### 전라북도 시군별/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

- 2017년 하반기 기준 전라북도의 시군별 15-29세 여성 고용률은 장수군과 임실군이 각각 42%,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정읍시와 익산시는 각각 20.7%, 25.1%로 15-29세 여성 고용률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2017년 하반기 기준 전라북도의 시군별 30-49세 여성 고용률은 김제시와 장수군이 각각 82%,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군산시와 완주군은 각각 51.6%, 53.5%로 30-49세 여성 고용률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I 시군별 15-29세/30-49세 여성 고용률 I



### 시도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 및 청년 고용률 추이

- 전라북도 기혼 여성의 15.9%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고, 비취업여성의 43.8%는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이후에도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
- 전라북도 20-29세 청년 고용률은 2007년 52.4%에서 2011년 46.3%까지 하락하였으나, 2014년 53.5%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48.5%를 기록
  - 전라북도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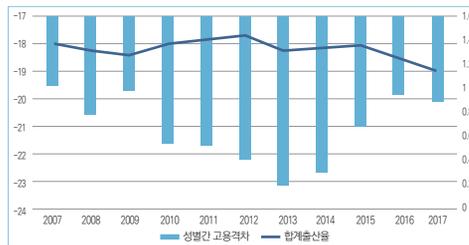
시도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2017) 및 청년 고용률 추이



### 성별 간 고용률 격차와 합계출산율 추이

- 전라북도의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와 합계출산율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성별 간 고용률 격차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고용률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 및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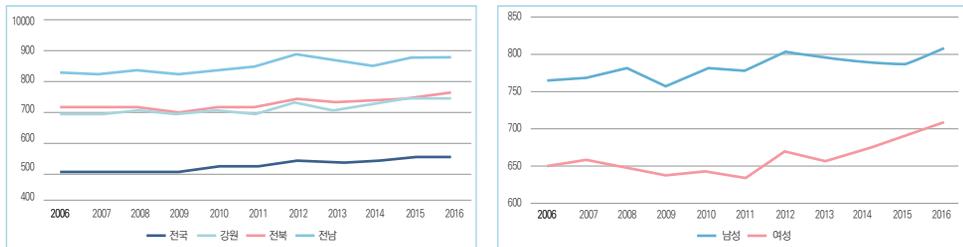


## 5 사망

### 전체 및 성별 사망률 추이(십만명당)

- 전라북도 사망률은 2006년 706.3명에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6년 758.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전라북도 성별 사망률은 2006년 남성 764.1명, 여성 649.1명에서 2016년 남성 807.7명, 여성 709.1명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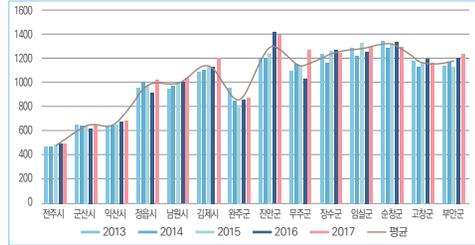
전체 및 성별 사망률 추이



### 시군별 사망률

- 2016년 전라북도 시군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진안군과 임실군이 각각 1,391.7명, 임실군 1,291.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전주시와 군산시가 각각 491.6명, 651.4명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2006년 대비 2016년 사망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진안군, 부안군으로 각각 23.2%,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완주군과 고창군은 각각 -5.0%, -4.4% 감소함으로써 사망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시군 중 최근 5년 간 사망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군 1,311.26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진안군 1,286.12명, 장수군 1,232.66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최근 5년 간 사망률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 480.9명, 군산시 641.1명, 익산시 662.78명 등으로 나타남

### I 2016년 기준 및 최근 5년간 시군별 사망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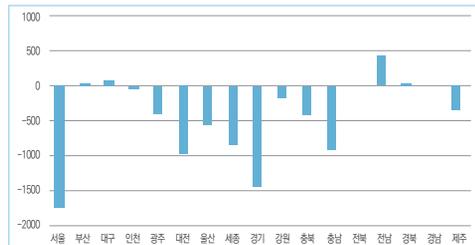


## 6 인구이동

### 이동인구 수 및 순이동률 추이

- 전라북도의 이동인구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음(-)의 순이동률을 나타냈으며, 2002년 순이동률이 -2.9%로 가장 낮은 상태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 순이동률 0.1%를 기록하며 지난 20년 간 가장 높은 상태를 나타냄
  - 2017년 전라북도의 총전입 인구는 232,047명, 총전출 인구는 239,253명, 순이동인구 -7,206명, 순이동률 -0.4%를 나타냄
- 2017년 전라북도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에서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에서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I 이동인구 수(전입, 전출) 및 순이동률 추이과 전출지별 순이동인구(2017) I



## 시군별 순이동인구 및 순이동률 변화

- 2017년 전라북도 시군별 순이동인구를 살펴보면 완주군, 고창군, 진안군 등에서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등에서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최근 5년 간 사망률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 480.9명, 군산시 641.1명, 익산시 662.78명 등으로 나타남
- 2017년 전라북도 시군별 순이동률 변화를 살펴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은 최근 5년 간 음(-)의 순이동률을 나타냈으며,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등은 양(+)의 순이동률을 기록함

1 시군별 순이동률 및 순이동률 변화 1



## 7 지역 고령화 변화

### 노인인구 비율 추이

- 전라북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7년 13.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18.6%를 기록하였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 전라북도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임실군, 진안군으로 각각 31.9%, 31.5%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 군산시로 각각 12.8%, 15.8%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김제시로 7.5%p 상승하였으며,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완주군으로 3.0%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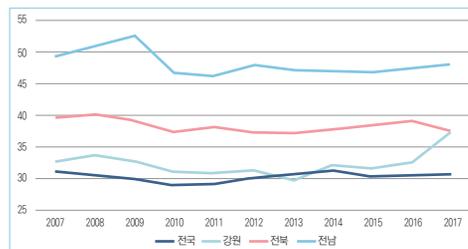
### 노인인구 비율 추이(2007-2017) 및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 65세 이상 고용률

- 2017년 전라북도 65세 이상 고용률은 37.6%로 전국 평균 30.6%, 강원도 37.5%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4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7년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 기간 전국 -0.5%p, 강원 4.9%p, 전남 -1.4%p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고용률 추이



## 8 시사점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 전라북도의 총인구는 199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전국 내 전라북도의 인구 비중이 1997년 4.3%에서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3.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
- 또한 통계청 기준 2045년 장래추계인구는 1,739,489명으로 추계되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35년 이후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예견됨

###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에 따른 저성장

- 지난 20년 간 전라북도의 인구변화 중 두드러지는 점은 연령별 인구 비중의 변화이며, 1997년 15세 미만 20.5%, 15-34세 35.6%, 35-64세 34.8%, 65세 이상 9.1%에 2017년 15세 미만 12.8%(-7.7%p), 15-34세 23.1%(-12.5%p), 35-64세 45.2%(10.4%p), 65세 이상 18.9%(9.9%p)로 변화하였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유소년인구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남
- 특히, 1997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4%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2017년 68.3%로 감소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소폭 감소하였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의 약화가 우려됨

### 도심지역에 집중하는 인구

- 전라북도의 시군별 인구는 2017년 기준 전주시에 전라북도의 35.0%의 인구가 거주하여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장수군은 1.2%의 인구가 거주하여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특히, 전라북도의 총인구 중에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66.0%에 달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분포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전라북도 내 전주시의 인구 비중은 33.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인구 비중은 64.3%에서 2017년 전주시의 인구 비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여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인 무주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서 2017년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인 장수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지역 내 인구 불균형이 심화됨
- 더불어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등 군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30%를 상회하며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0.0%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임실군, 순창군 등은 6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감소추세의 합계출산율 변화

-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현재 1.151명으로 2007년 1.38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전국 평균 1.052명, 인구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1.123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전라남도 1.325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순창군과 진안군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각각 1.795명, 1.625명으로 나타났지만, 전주시, 고창군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054명, 1.044명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내에서도 출산율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7년 대비 2017년 순창군과 부안군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 내 모든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주군과 고창군의 감소율이 -35.6%, -30.1% 등 합계출산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생건수 역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2017년 전라북도 내 모든 지역에서 출생건수가 20% 이상 감소
  - 2007년 대비 2017년 출생건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무주군과 장수군으로 각각 -54.8%, -50.8% 감소하였고, 장수군은 출생건수가 98건으로 100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④ 혼인율 감소 및 만혼 증가세

-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혼에 대한 근거로 전라북도의 여성 천명당 혼인율은 2007년 13.4명에서 2017년 9.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동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인 -30.2%보다 높은 -32.1%로 혼인율 감소가 두드러짐
- 2007년 대비 2017년 전라북도의 연령별 여성 혼인율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혼인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30대 여성의 혼인율이 증가
  - 2007년 여성 20-24세와 25-29세 혼인율은 27.4명, 86.4명에서 2017년 12명, 60.1명으로 감소하였고, 30-34세와 35-39세 혼인율은 28.7명, 8.6명에서 42.3명, 13.3명으로 증가하여 만혼 추세가 나타남

### ④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구유출

- 전라북도의 인구이동은 1997년 이후 총전출인구가 총전입인구를 상회하여 인구유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2년, 2004년에 순이동인구가 -56,735명, -50,969명으로 유출된 인구가 지난 20년 간 가장 많은 연도로 나타났으며, 이후 순이동률이 0%에 근접하며 2011년에는 총전입인구가 총전출인구를 상회하여 인구유입을 나타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순이동인구가 음(-)의 상태를 유지하였고 2017년 현재 순이동인구 -7,206명을 기록함
- 전출지별로 순이동인구를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4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 95명, 경북 51명 등에서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1,751명, 경기 -1,463명, 대전 -977명 등은 유출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전라북도의 지역 중에서는 완주군과 임실군, 고창군 등이 양(+)의 순이동률을 기록하며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등은 음(-)의 순이동률을 기록하여 유출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사망률

- 2016년 전라북도의 사망률은 758.2명으로 전국 평균 549.4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 대비 2016년 사망률은 7.3%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10.9%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16년 전라북도의 남성 사망률은 807.7명으로 여성 709.1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06년 대비 2016년 남성 사망률은 5.7%, 여성 사망률은 9.2% 증가
- 2016년 진안군, 임실군은 전라북도 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전주시, 군산시는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군지역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급격한 고령화 진행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전라북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 18.6%로 2007년 대비 4.7%p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은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임실군, 진안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31.5%, 31.9%로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완주군을 제외한 군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07년 39.7%에서 2017년 37.6%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07년 대비 2017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전국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1%p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고용률이 하락
  -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인구의 일자리, 생활기반시설 등 다각적인 대비책이 필요

## II 우수사례 검토

### 1 국내사례

#### 타지역 기본계획

##### 1 시부

###### ■ 세종특별자치시

- 계획배경 및 필요성
  - 공공기관의 이전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2030년까지는 인구 증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건설 완성 후에는 인구유입 감소로 전국 출산율과 같은 시대적 사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 계획 방향 및 비전
  - 임신, 출산 인프라를 확충하여 결혼부터 양육까지 편안한 환경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
  - 맞벌이가구를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전체가 출산과 돌봄에 참여하도록 장려
- 주요사업 유형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행복맘 통합지원센터 운영, 모든 가정 산후조리 지원 등 임신, 출산, 돌봄 인프라 조성
  - 작은 결혼식장 확대, 기업 내 출산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하여 결혼문화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
  - 학교 방과 후 관리 체계화, 등하교 시 안전관리, 영유아·청소년 단계별 지원체계 확립 등 출산 이후 교육지원

## 2 도부

### ■ 경기도

- 계획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 비혼, 만혼 및 자녀 양육비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저출산 문제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기인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할 정책적 관심제고 필요
- 계획 방향 및 비전
  - 기존의 여성·복지 분야에 국한된 저출산 정책이 아닌 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생애주기별 복합적 융합과제로 도정전반에 걸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접근
  -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 및 체계적 접근강화, 정책 제언 등을 통한 공조체계 기틀 마련과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시스템화를 통하여 인구관점의 정책 추진
- 주요사업 유형
  - 경기도 맞춤형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조성하여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인구정책 추진
  -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강화, 공보육 확충, 보육인력양성 등 공공돌봄정책 강화를 통하여 보육 인프라를 경기도 전반에 걸쳐 조성
  -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정착

### ■ 전남 해남군

- 계획배경 및 필요성
  - 해남군은 2000년대 초 인구 10만 붕괴 후 전출인구 감소와 신생아수 증가를 통한 지역 인구 증대를 위해 2008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정책팀'을 신설
- 계획 방향 및 비전
  - 해남군은 출산장려 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였고,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

- 수혜자 중심의 지원정책, 출산·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감성자금 감동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

• 주요사업 유형

- 양육 부모의 현실을 감안하여 월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난임부부의 의료실비와 교통비를 국가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
- 출산 후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 ‘산모·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 셋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 주간지에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글 게시, 재능기부를 통한 신생아 작명사업 등 부모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는 정책 시행
-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유모차 행진 음악회’ 등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 시행

■ 강원 화천군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강원도 화천군은 접경지역 및 군사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 규제가 지역 주민의 이촌향도 현상을 촉진시켰고, 이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
-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정주기반이 흔들린다고 자체적으로 진단하였고, 교육복지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활성화 전략을 추진

• 사업 방향 및 비전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산율 전국 1위, 인구 3만명 달성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세워 이를 위한 기본정책, 발전방향, 비전제시, 중·장기 방향 설정 등 체계적으로 추진계획 마련
- 교육 및 복지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청소년 교육, 창조인재 육성 등의 세부 부문에 있어 다양한 조례 제정

- 주요사업 유형
  - 장난감대여소, 키즈영어아카데미, 키즈문화아카데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등 다양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 화천어린이도서관 운영, 중학생 어학연수 추진, 공교육 지원 확대,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학등록금 특별지원,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자녀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 타시도 우수사례

### 1 시부

#### ■ 서울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 사업개요
  - 임신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 제공
- 사업내용
  - 방문간호사 또는 복지플래너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체크, 아이 돌보기 방법 교육, 엄마모임 커뮤니티 운영 등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 현물 도는 현금 제공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임신부와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 성과 및 기대효과
  - 지속적인 가정방문으로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산모의 사전·산후 정신건강 증진
  - 선진 교육 프로그램(MECSH, Maternal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의 성공적 국내화로 서울형 모델 개발

## ■ 서울 성북구 뉴-베이비 가족행복타운

- 사업개요
  - 2017년 저출산 극복 인프라 및 행정 기반을 구축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행(童行) 성북구를 구현
  -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저출산 극복 성북맞춤형 통합망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아동·가족친화도시 인프라 조성
- 사업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극복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의견 수렴
  - 공급자 중심 위주의 정보망을 개편하여 성북맞춤형 온라인 통합망을 구축하여 생애주기 가족행복 지원체계 조성
- 성과 및 기대효과
  - 가족행복 '행복타운'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 생애주기 성북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통하여 사회의 저출산 인식개선
  - 복지와 사회투자를 통한 일과 생활균형 가족 행복 증진

## ■ 서울 강동구 WIN-WIN프로젝트

- 사업개요
  - 다자녀가정과 기업체(단체) 간 결연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과 관심 증진, 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계
- 사업내용
  - 기업체와 결연한 다자녀 가정(넷째 이상)에게 1년(최장 3년)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
  - 방문,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기업-단체를 모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연방식을 채택
- 성과 및 기대효과
  - 저출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관심을 증대시켜 시민들의 인식개선 일조
  -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저출산이 단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며, 가정, 정부, 기업이 같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 함양

## ■ 울산 북구 '세대공감 창의 놀이터' 운영

- 사업개요
  - 주민 기피시설이자 갈등요인이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족친화시설로 전환하여 돌봄공간으로 활용하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누리과정과 연계한 나무놀이터, 그물놀이터 등 창의력 증진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여 공공육아 돌봄시설 제공
  - 육아맘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놀이터 운영, 마을주민 쉼터 및 사랑방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운영
  - 토요일 가족공방, 쿠킹스토리, 1박2일 캠프 등 아빠와 아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중심의 양육문화를 개선
- 성과 및 기대효과
  - 놀이터 공간에서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마을공방, 마을사랑방 등의 공간에서는 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 제공

## ■ 세종형 출산정책

- 사업개요
  - 광역지자체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모든 출산가정에 가정산후조리 지원 등을 통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형 출산정책 시행
- 사업내용
  - 행복맘 원스톱 서비스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관리, 임신·출산·육아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 마을단위 복합 커뮤니티센터(공동육아 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를 조성하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광역 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지역의 출산지원 인프라 구축
  - 휴대폰 APP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 공간제공, 육아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아이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 성과 및 기대효과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갖춘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아동, 여성 정책 지속 추진으로 국가적 저출산 위기 극복

## 2 도부

### ■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

- 사업개요
  -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여, 인구정책 관련 토의 및 인구 영향평가, 인구정책평가지표, 일자리·저출산 SIB사업 신규 정책사업 발굴
- 사업내용
  - 인구영향평가 설계를 통하여 인구관점의 정책타당성 평가 및 미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인구영향평가 모델 개발과 법제화 추진
  - 경기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도 전체 사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 성과 및 기대효과
  - 광역수준의 정부에서 인구정책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으로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 ■ 충북 청주시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University City Company) 네트워크

- 사업개요
  -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란 대학(University), 도시(City), 기업(Company)이 함께 협업하는 네트워크로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와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
  -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조성

- 사업내용
  - (University) 학생 저출산 인식개선 강의 마련·활성화,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시민 인식개선,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 (City)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가족친화 사례 수집·개발·공유, 가족친화 제도 시행 관련 행·재정적 지원
  - (Company) 경력단절여성 채용 노력,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조성,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UCC 네트워크 홍보 및 참가 독려
- 성과 및 기대효과
  - 대학 내 '결혼과 가정', '여성과 사회' 등 저출산과 관련된 강의를 증설되어 대학생들의 인식개선에 도움
  - 기업 내 가족의 날 확대·운영과 지속적인 일·가정 양립 캠페인 개최

## ■ 강원 1.7 희망플랜

- 사업개요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신부를 사전에 발굴 등록하여 임신 전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분만취약지의 고위험 산모 증가 해소를 위해 지능정보기술 활용, 공공·민간이 협업하여 고위험산모 발굴 및 산모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보건소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등의 통합 활용 및 확대발전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성과 및 기대효과
  -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취약지역 협력병원과 상급병원 간 응급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응급상담 제공, 응급이송 비용 지원

## 2 해외사례

### 미주

#### 1 미국

##### ■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혼외출산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저소득층 아동 및 편부모가정의 문제가 대두
  - 상기의 근로가능 빈민들의 빈곤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회문제들과 연관되고 심화되었으며, 공공부조제도가 복지의존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PRWORA(개인책임-근로기회조정법)의 개혁 시행
- 정책 방향 및 비전
  - PRWORA를 통해 연방정부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등 프로그램들을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아동복지 향상과 건전한 결혼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형성하도록 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강조
- 주요사업 유형
  - 최장 5년간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되 지원기간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주당 30시간 이상 원칙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여 가정의 자생력을 제고
  - 건전한 결혼을 장려하고 혼외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선정된 몇 개의 주정부를 대상으로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매칭 펀드를 지원
- 세제혜택과 일·가정양립 정책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지원과 동시에 근로활동 참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능력과 삶의 질 향상

- 정책 방향 및 비전
  - 낮은 임금을 받는 19세 이하 또는 전일제 학생과 24세 이하인 자녀를 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
  - 산전후휴가를 무급으로 시행하고, 압축근무주(일주일 4일 근무), 직무공유(일주일 2.5일 근무) 등 출산 후 직장복귀와 탄력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
- 주요사업 유형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교육비세액공제(HOPE scholarship, Lifetime Learning),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의료비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
  -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을 통해 출산 혹은 입양 여성에게 12주간의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사용 후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전과 동일한 직급에 복귀한 것을 규정

## 2 캐나다

### ■ 퀘벡주 QPIP(Quebec Parental Insurance Program)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캐나다는 많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 가고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참여도가 저조하여 여성에게 과도한 가사노동의 부담이 부여됨
  - 이는 남성육아휴직제도의 소득대체율이 55%에 불과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참여율이 22%를 초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
- 정책 방향 및 비전
  - 이에 퀘벡주는 연방정부의 고용보험보다 높은 급여액과 아빠들만 사용가능한 독자적인 퀘벡부모보험계획을 도입
  - 남성육아휴직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 5주의 daddy quota를 도입
- 주요사업 유형
  - 대기기간 없이 18주의 모성휴가급여, 5주의 부성휴가급여, 32주의 육아휴직급여로 구성

- 모성휴가와 부성휴가급여는 이전 소득의 7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첫 7주간은 소득의 70%, 이후 25주간은 소득의 55%를 지급
- 최대 급여액은 주당 690달러로 연방정부 고용보험보다 높으며, 부모는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급여액을 받는 특별계획을 선택할 수 있음

## 유럽

### 1 프랑스

#### ■ 가족정책의 법제화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프랑스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경험하였고, 1960년 2.73명에서 1993년 합계출산율이 1.65명까지 감소
  -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1994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가족관련 연례회의(Confrence de la famille)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법제화하여 관련부처장관, 가족관련 단체, 사회보장기금대표들이 모두 참석하여 정부의 가족출산정책의 방향, 주요 정책 진전 상황에 대한 논의
- 정책 방향 및 비전
  -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인구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정책을 추진
  - 가족수당과 함께 양육비용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다양한 가족급여(Prestation familiales, Family benefit)가 있으며, 가족급여에는 가족 규모나 소득을 고려한 재분배 기능의 제도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등으로 구분
  - 가족수당제도 이외에 육아휴직, 입양장려, 주택관련 지원제도, 사회보장기구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 등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주요사업 유형
  - 가족수당, 다자녀가구보충수당, 가족지지도당, 적극적 연대소득, 영유아보육수당 등 자녀의 수, 가족의 형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당을 지급

-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 시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
- 소득 및 자녀수를 기준으로 주택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가족에 대한 주택보조금 및 주택제공 편의를 확대

## 2 스웨덴

### ■ 남녀평등에 기반한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스웨덴은 1960년대의 소극적인 가족정책에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가족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갔으며, 합계출산율이 1992년 1.52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정책 방향 및 비전
  -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 남녀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양성평등에 기반하여 부모 모두에게 아동 양육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경감
  - 노동시장에서는 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 재산 유무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 주요사업 유형
  -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급여를 지급하며, 3자녀 이상일 경우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분야의 대폭적인 여성 고용(전체 여성고용의 50% 수준)을 통해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
  - 유급 모성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부와 모 모두의 권리로 정착시켰고, 출산 이후 법으로 직장복귀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

### 3 노르웨이

#### ■ 육아 휴직 제도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노르웨이의 육아 휴직 제도는 유럽에서 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된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에 유급 육아 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
  - 육아 휴직 제도가 출산장려만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기보다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 정책 방향 및 비전
  - 노르웨이의 육아 휴직 제도에는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추가 휴가 제도 등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양성평등이 강조되어 개별인 휴가보다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부모휴가가 강화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남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 분담, 성평등 제고 등의 목표로 육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며, 가족형태, 다자녀 출산 및 입양, 부모의 소득, 독신 부모의 휴직까지 다양한 정책 수혜 대상을 고려
- 주요사업 유형
  - 근로여성이 임금의 100% 수준의 급여 혜택을 받고 1년간의 부모 육아휴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다자녀 출산 또는 다수의 자녀를 동시에 입양할 경우, 자녀 1인당 5주간의 100%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80%의 임금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7주 간의 유급 출산 휴가가 주어짐
  - 근로시간계정(Arbeitszeitkonto, time-banking, 단위 기간 내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반면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충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휴가 기간 중 시간제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 자녀의 보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병행

## 4 네덜란드

### ■ 일·가정 양립정책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가부장적 전통가치가 강한 네덜란드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보육시설의 확충, 다양한 휴가제도 등의 정책 도입
- 정책 방향 및 비전
  -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직종에 따라 재택근무를 택할 수도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역시 책임을 공유한다는 생각 아래 아동 보육서비스, 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 시행
  -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다양한 휴가제도와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
- 주요사업 유형
  - Part-time plus라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시장에 파트타임 노동을 정착시키고, 파트타임 업무를 보다 비중 있는 역할을 맡도록 유도
  - 직장 내 보육시설 제공 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주들의 보육시설 제공 장려를 촉구
  - 지방자치 지역마다 청소년가족센터를 설립하여 정보 제공,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족과 관계된 일에 대한 도움을 제공
  - ‘가족’을 ‘양육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양육보조금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수령액도 증액

## 아시아

### 1 일본

#### ■ 돗토리현 출산장려 정책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돗토리현의 인구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566,306명으로 일본 47개 현 중 인구가 가장 적은 현에 속하며, 2000년대 초까지 합계출산율이 1.50명 정도로 일본 전국 합계 출산율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
  - 2005년을 기점으로 일본 전국 출산율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어,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2010년 9월 '육아왕국 돗토리 건국 선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 정책 방향 및 비전
  - 돗토리현은 2010년 9월 '육아왕국 돗토리현'을 만들기 위한 건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이 선언에는 '돗토리 육아부대' 결성, '돗토리 육아의 날' 제정과 더불어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을 당부
  - 돗토리현의 출산장려 정책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일-가정 양립' 등 출산 전반에 걸쳐 지원하며, 나아가 정부의 지원 외에도 현, 주민, 지원단체, 시정촌, 보호자의 의무 및 역할을 강조
- 주요사업 유형
  - 돗토리 만남 서포트센터를 설립하여 만남 주선, 불임 치료비 비용과 임신 검사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용 부담 완화
  -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전·산후 체계적 지원과 더불어 보육 무상화 정책 시행을 통하여 육아 경제적 부담 경감
  - '돗토리 육아 부대' 육아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육아 지원 자원봉사자와 육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연계
  - 육아 휴직을 시행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육아 왕국 돗토리현' 추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선정,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 강좌 개설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 ■ 도쿄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200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9명이었으며, 도쿄는 1.0명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3년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2004년 「소자녀화 사회 대책 대강」 등을 발표
  - 도쿄는 정부차원의 정책 외에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아기가 빛나는 거리 도쿄플랜」, 「복지 개혁 추진 플랜」)을 추진하였고, 더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을 도입
- 정책 방향 및 비전
  - 도쿄시의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은 사회시스템 전체를 저출산과 소자녀화(小子女化)를 전제로 한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구축
  - 따라서 보육, 보건, 의료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거주지 정비, 교통안전, 유해환경 개선 등의 환경적 기반정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
  - 맞벌이부모와 재택육아 전업주부 가정 모두를 포괄한 모든 육아가정을 정책의 대상으로 강조하였고, 아동과 부모뿐 아니라 '가정'자체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가정에 대한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등의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 주요사업 유형
  -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지역의 체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 체제의 정비, 교육환경 정비 등 지역 내 안심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전·산후, 육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 직장의 양육친화적 문화 정착, 도시형 보육서비스(야간 보육, 연장 보육 등) 사업을 시행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
  -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아동학대 방지, 한부모가정의 자립 지원, 장애아 지원 등의 요보호 아동 및 건강가정 지원

## ■ 츠키타카쵸 어린이 육아 정책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홋카이도의 츠키타카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2011년 인구 3,888명, 1,764세대이며, 아동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가구수나 가구당 평균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
  - 또한 츠키타카쵸의 여성 취업률은 일본 전국 평균과 홋카이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육아가정 중 엄마가 일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 육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정책 방향 및 비전
  - 어린이 육아 정책의 기본이념은 '어린이와 부모와 지역에서 만드는 자연과 미소가 넘치는 마을'로서 지역의 육아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
  - 츠키타카쵸 단일의 정책보다는 상위 지자체인 홋카이도와 연계한 정책들과 홋카이도 내 각지 기업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
- 주요사업 유형
  - 학동보육소 운영, 아동 대책 협의회 조성, 공립보육원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의 육아지원 체계를 구축
  - 지역 보건센터 설립, 유아검진, 임산부 건강검진 등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건강의 확보 및 증진
  -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 도로교통 환경정비 등 지역 인프라 조성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육환경을 정비

### 3 시사점

#### 시사점

##### 1 국내

###### ■ 출산·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정책에 집중

- 분만취약지역, 교육환경 미비지역 등 육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공동육아센터, 통합 지원센터와 같은 출산·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구축이 필요

###### ■ 단일 지방자치단체 정책에서 지역 내, 지역간 연계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 지역사회가 저출산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 민관이 연계한 정책들과 인접 지역간 연계한 정책 수립 및 발굴 활성화

######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기존의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조적 수행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책, 나아가서는 인구계획을 수립

##### 2 국외

###### ■ 육아의 책임을 부와 모가 함께 공유하고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출산 후 법으로 명시한 직장복귀 등으로 남성의 육아참여율을 높이고, 출산 이후에도 여성의 직장복귀를 보장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강력한 일·가정 양립 정책 시행
- 공공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여성에게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어린 자녀의 보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

■ 전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저출산 대책 시행으로 지역의 역량을 집중

- 광역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육아왕국’의 건국 선언을 발표했으며, ‘육아의 날’ 제정, ‘육아부대’ 결성 등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 전체의 협력을 유도한 정책시행으로 지역의 역량을 집중

■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한 종합적인 지원

- 단지, 가임여성, 임신부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벌이부모, 재택육아 전업주부 등 아동과 부모뿐 아니라 ‘가족’과 ‘가정’ 자체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등 생활밀착형 종합적인 지원

Ⅰ 국내외 우수사례 Ⅰ

유형		주요 내용
국내	육아인프라 환경 조성	-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인구활성화 전략 추진 - 기피시설을 가족친화시설로 전환하여 돌봄공간으로 활용 -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문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 대학, 도시, 기업이 협업하여 일·가정 양립문화와 양성평등 문화 정착 - 맞벌이가구를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전체가 출산과 돌봄에 참여하도록 유도
	지역사회 연계형	- 가족행복 ‘행복타운’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 다자녀가정과 기업체 간 결연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 출산장려 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정책 컨트롤 타워 마련 -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조성
국외	육아인프라 환경 조성	- 다양한 가족수당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용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다양한 가족급여를 제공 - 모든 육아가정을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등의 종합적인 지원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 유급 출산휴가를 부와 모의 권리로 정착시켰고, 출산 이후 법으로 직장 복귀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 - 남성육아휴직제도의 자격조건 완화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시켜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담된 가사노동을 경감 - 공공분야의 대폭적인 여성고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연계형	- 상위 지자체와 연계한 정책과 광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사업시행으로 소규모 지역의 가정에 대한 육아를 포괄적으로 지원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 ‘육아왕국 dots리현’을 만들기 위한 건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현, 주민, 지원단체, 시정촌, 보호자의 의무 및 역할을 강조

## Ⅲ ) 전라북도 사업 검토

### ①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 🔗 개요 및 유형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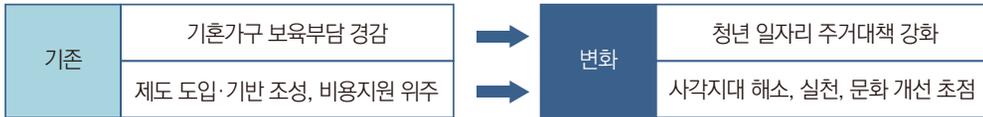
##### ■ 수립배경

- 1·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
-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시야의 관점에서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

##### ■ 계획 주요내용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 강화
  - 청년 일자리·주거 등 청년정책이 대폭 포함됐고,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에 초점
  - 육아지원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균형적 대응

## Ⅰ 저출산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Ⅰ



## 2 유형

###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만혼추세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청년고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결혼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와 더불어 공공·민간의 적극적 고용창출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지원제도의 기준 현실화

###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제도 강화
  -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고위험 산모 지원, 분만취약지 해소 등 임신·출산 여건을 확충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을 확립하고 공공·민간의 자녀 돌봄 여건을 확충하여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
  - 질 높은 시설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환경 조성

###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현장의 문화 행태를 개혁하고,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천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
  -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양립 실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 육아휴직제도의 중장기 개편 방안 논의 추진

## 유형별 내용

### 1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

#### ■ 청년고용 활성화

- 사업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형성 추가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추가 설치 등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
- 사업내용
  - 7.7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한 해외 취업 지원(4,500여명)
  - 중소기업 근로자의 취업·장기재직 유인 제고를 위한 자산 형성 6만명 추가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 지속 확대('17년 71개 → '18년 101개), 대학창업펀드 200억원 조성

#### ■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사다리 강화

- 사업개요
  -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 강화
- 사업내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공급, 국립대 기숙사 건립 시 기혼대학(원)생 숙소 5% 이상 확보
  - 전세임대주택, 맞춤형 행복주택 신혼부부 모집 물량 확대,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출시 등 전세·구입자금 대출 우대 강화

## 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 임신·출산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임신·출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난임치료휴가제 도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확충 등 임신·출산 지원 확대
- 사업내용
  - 출산산모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3인 병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신규 설치, 난임치료휴가제 도입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고위험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

### ■ 아동·가족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아동수당 도입,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 양육비 인상 등 아동·가족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 실시 자료 등 빅데이터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 3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 ■ 맞춤형 돌봄 확대

- 사업개요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확충과 함께 아이돌봄·다함께돌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확대

- 사업내용

- 국공립·공공형 직장 등 공공보육 확충,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선택적 참여에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 초등돌봄 서비스 내실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모델 개발·확산, 아이돌봄 이용가구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교육개혁

- 사업개요

- 자유학기제 등 중등·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 사업내용

-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내실화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추진
- 반값 장학금 지원 대상을 52만명에서 약 60만명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셋째 이사 자녀에서 해당 가구의 모든 자녀로 확대

#### 4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 일하는 방식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개선

- 사업개요

-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등 일하는 방식 변화 유도
-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업 지원 제도 개선

- 사업내용

- 주 총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유연근무제 정착과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확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단축 전 근무시간에 따른 근속기간 인정
-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 중소기업·남성·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 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자 확대와 비정규직 등 모성보호 모니터링 지속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 육아휴직 지원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 ‘모성 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활용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제도 집중 홍보

2 전북 저출산 기본계획

🔗 개요

1 계획 개요

■ 비전 및 목표

- “모든세대가 함께 행복한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확대, 지역 맞춤형 돌봄교육,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162개 사업 시행

■ 계획 추진방향

- 양육부담 완화 및 안전한 공보육 기반 확대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공립·공공형 공보육 기반 확대
-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취약가족 역량강화 및 건강가족 육성
  - 취약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생활 역량 강화 지원 및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 도모

-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요보호아동에 가정과 같은 양육환경 조성 및 생애주기별 인식개선을 통한 결혼·가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변화 유도

## 사업 유형

### 1 유형구분

####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의 2개 분야

####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의 3개 분야

####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맞춤형 보육, 돌봄지원체계 강화, 교육개혁 추진의 3개 분야

####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의 1개 분야

### 2 유형별 특성 및 사업

####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확대, 미혼남녀 만남프로그램 등 10개 사업에 대해 1,262백만원 투입

####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비 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생활자립 지원 등 82개 사업에 대해 59,272백만원 투입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확대 및 내실화 추진,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48개 사업에 대해 202,247백만원 투입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남성육아휴직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남성육아 홍보,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등 22개 사업에 대해 1,929백만원 투입

 **사업 예시**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 사업개요
  - 도내 기업이 상시 근로인원 외에 청년을 추가 채용하도록 촉진하고, 청년은 현장실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청년 실업 및 기업 인력난 해소
- 사업내용
  - 도내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관찮은 중소기업 등에 신규채용 촉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 시 12개월 동안 월 최대 65만원(연 최고 780만원) 급여 지원

■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 사업개요
  - 무주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 반값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입주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 전세임대 주택(매년 1,000여호) 제공 및 지방대학생, 저소득층·귀농귀촌인에게 빈집을 활용한 반값임대 주거 제공

##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사업개요
  -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에 도움을 줌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
- 사업내용
  - 출산취약지 거주 임신 24주부터 분만까지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도내 7개 군 보건소에 서 임산부의 산전 진찰 및 분만이송 시 교통비를 지원

### ■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 사업개요
  -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에게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150일 기간 내 70일간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

##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 ■ 아동급식지원

- 사업개요
  -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및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의 가정에게 아동급식을 지원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개요
  - 보육교사의 근무 기피현상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 선비를 지급하여 보육서비스 강화 및 보육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

####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문화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변화 유도
- 사업내용
  - 가족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

##### ■ 육아휴직 활성화

- 사업개요
  - 남성의 육아참여도 향상을 위한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남성육아휴직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남성육아휴직 제도 지속적 홍보
- 사업내용
  - 남성육아휴직 홍보 및 순회 교육, 남성육아휴직 운영 우수기업 인센티브(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지원한도 우대 등) 지원

### 3 전북 저출산 관련 사업

#### 총괄

#### 1 출산지원정책

##### ■ 지원시기

- 전북의 출산지원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네 가지 시기로 구분 시 양육시기와 출산시기의 출산지원정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7건, 2.7%), 임신(43건, 23.0%), 출산(69건, 36.9%), 양육(68건, 38.4%)

#### | 지원시기별 출산지원정책 |

지원시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건	7	43	69	68
비중(%)	3.7	23	36.9	36.4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18, 재구성

##### ■ 지원구분

- 전북의 출산지원정책을 현금, 현물,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교육, 홍보 분야로 구분 시 서비스와 현금지원정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39건, 20.9%), 현물(25건, 13.4%), 바우처(3건, 1.6%), 서비스(50건, 26.7%), 교육(30건, 16%), 홍보(40건, 21.4%)

#### | 지원구분별 출산지원정책 |

지원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교육	홍보
건	39	25	3	50	30	40
비중(%)	20.9	13.4	1.6	26.7	16	21.4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18, 재구성

■ 수혜인원

- 전북의 출산지원정책의 수혜인원은 총 163,472명으로 결혼 2,356명(1.4%), 임신 20,083명

Ⅰ 출산지원정책 수혜인원 Ⅰ

수혜인원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명	2,356	20,083	35,772	105,261
비중(%)	1.4	12.3	21.9	64.4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18, 재구성

2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현황

-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전북의 모든 지자체는 첫째아 출산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아 기준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순창군(3,000천원), 진안군(2,200천원)으로 나타났고, 출산지원금 지원시기가 가장 빠른 곳은 익산시로 2004년, 가장 늦은 곳은 장수군으로 2017년인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전북의 지자체 중에 출산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순창군(980백만원), 익산시(913백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출산지원금 수혜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순창군(4,634명), 군산시(1,654명)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1인당 수혜받은 출산지원금액은 순창군이 4.7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군산시 3.03백만원, 남원시 2.97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고창군, 정읍시, 김제시는 1인당 수혜받은 출산지원금액이 각각 0.50백만원, 0.70백만원, 0.71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됨

### 출산지원금 현황

구분	출생순위별 지원(천원)					예산액(백만원, 명)			시행 시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결산	인원	1인당 지원금액	
전주시	-	300	1,200	1,200	1,200	729	898	1.23	2011
군산시	100	300	1,000	3,000	3,000	545	1,654	3.03	2013
익산시	500	2,000	3,000	5,000	10,000	913	1,328	1.45	2004
정읍시	300	1,000	3,000	10,000	10,000	746	522	0.70	2005
남원시	200	1,500	3,900	3,900	3,900	333	987	2.97	2005
김제시	-	1,000	2,000	3,000	5,000	355	252	0.71	2005
완주군	500	1,000	6,000	6,000	6,000	579	840	1.45	2009
진안군	2,200	2,200	10,000	10,000	10,000	390	381	0.98	2007
무주군	500	1,200	3,600	4,800	6,000	144	135	0.94	2005
장수군	1,000	2,000	5,000	10,000	15,000	152	435	2.86	2017
임실군	1,000	2,000	3,000	5,000	-	267	246	0.92	2008
순창군	3,000	4,600	10,000	15,000	15,000	980	4,634	4.73	2013
고창군	1,000	2,000	5,000	7,000	10,000	461	231	0.50	2009
부안군	1,000	2,000	6,000	8,000	10,000	376	289	0.77	2016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18, 재구성  
 주: 출산지원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금과 분할금을 구분하지 않음.

## 지자체 사업

### 1 남원시, 출산·돌봄 지역거점형 네트워크 구축

#### ■ 사업개요

- 민간 산부인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촌지역의 돌봄·육아 인프라가 전무한 지리산 인접의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자 인접 시군과 연계한 출산·돌봄 지역거점형 네트워크 구축

#### ■ 사업 주요내용

- 남원·임실·순창 출산지원담당, 산부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MOU를 체결하고 돌봄의 사회화 추진
- 산부인과 전문의 보강으로 지리산권 산모보건 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
- 출산 8주 이내 기간 동안 전체 산모 대상으로 방문 산후조리 지원, 농촌지역 마을의 작은 도서관 연장운영, 학습독서지도 등을 통해 공동체 돌봄 지원

## 2 완주군,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

### ■ 사업개요

- 여성정책과 출산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 허브로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육아커뮤니티 조성
- 가족문화교육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일·가정양립 종합상담센터, 여성새일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육아와 관련된 유관기관이 위치하여 출산정책 시너지효과 창출

### ■ 사업 주요내용

-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내 가족문화교육원·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신축
- 초등 이하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공유, 아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체험, 가족 품앗이 등으로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자치 공동육아 돌봄 시스템 운영
- 장난감 대여, 도서관 운영을 비롯해 부모 각각의 재능과 장점을 살린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지도하는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 3 순창군, 해피니스 PCN(Pregnancy, Childbirth, Nurture)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 ■ 사업개요

- 구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임신-육아-교육-일자리 등을 연결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아이 키우기 좋은 복합문화공간’을 창출

### ■ 사업 주요내용

- 출산·양육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임신-육아-교육-일자리 등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 출산을 위한 산모쉼터를 설치하여 산모요가, 태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육아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수행
- 민간단체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도 입주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저출산 극복하는 거버넌스 구축

- 특히, 여성 새일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일자리 연계 및 고용유지 상담을 진행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

#### **4 고창군,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 **■ 사업개요**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도를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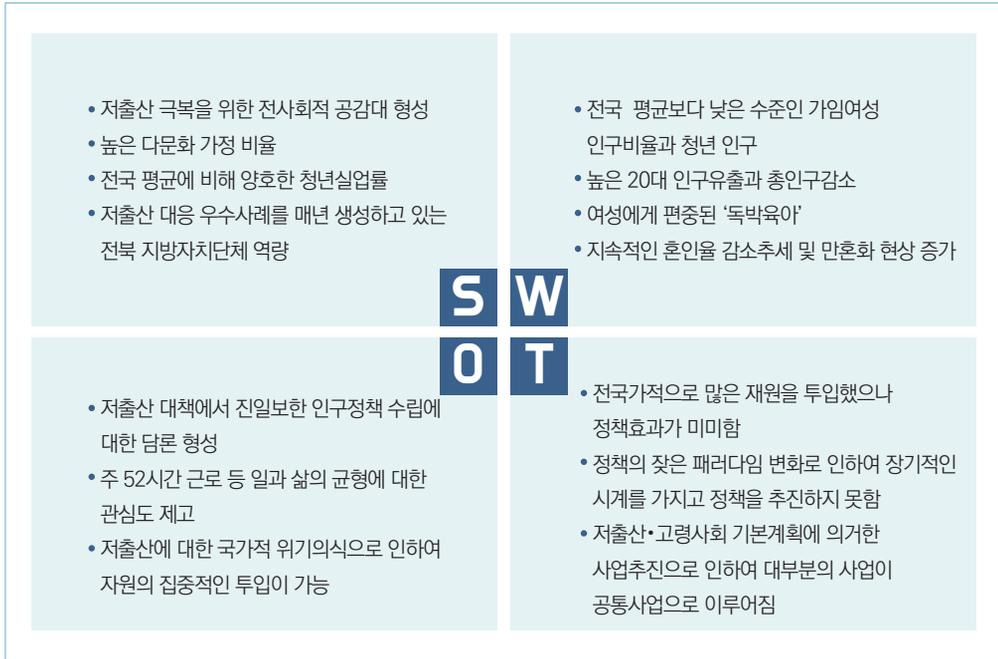
##### **■ 사업 주요내용**

- 지자체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임대주택 유형과 공급호수를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LH)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선 건설사업비의 10% 이상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LH가 부담
- 공공임대주택과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음

## 4 관련계획 종합

### SWOT

#### I 전북 저출산 SWOT I



### 시사점

#### 1 전략 방향성 도출

##### ■ Strength-Opportunity 전략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20대 청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역간 연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 ■ Strength-Threat 전략

- 지역사회가 전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 방안 마련

- 다년간 축적된 저출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 **Weakness-Opportunity 전략**
  - 강력한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의 부담을 경감
  - 인구의 자연증가라는 일차원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 마련
- **Weakness-Threat 전략**
  -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지역의 출산·돌봄 인프라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정주인구 증가하는 전략 수립
  - 지역의 여건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여 지역맞춤형 종합전략 기획

## IV ) 저출산 방향 검토 및 사업 방향

### ① 저출산 방향성 정립

#### 🔗 저출산 대책 접근 전략

##### ■ 지역내 전략

##### ■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원, 통제, 관리하는 계획형식에서 탈피하고, 지역의 기업, 대학,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이 당면한 저출산사회를 극복하는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저출산 환경을 고려한 지역특화 핵심정책을 개발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으로 전환

#####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의 삶의 질 제고

-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는 주로 여성,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므로 남성, 민간기업, 비정규직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국외의 저출산 대응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보장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며,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으로 출산정책이 여성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 생애주기별 중장기 인구정책과 연계한 저출산 대책 수립

-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연계된 저출산 사업들을 구상

- 이를 위해 지자체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의 인구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2 지역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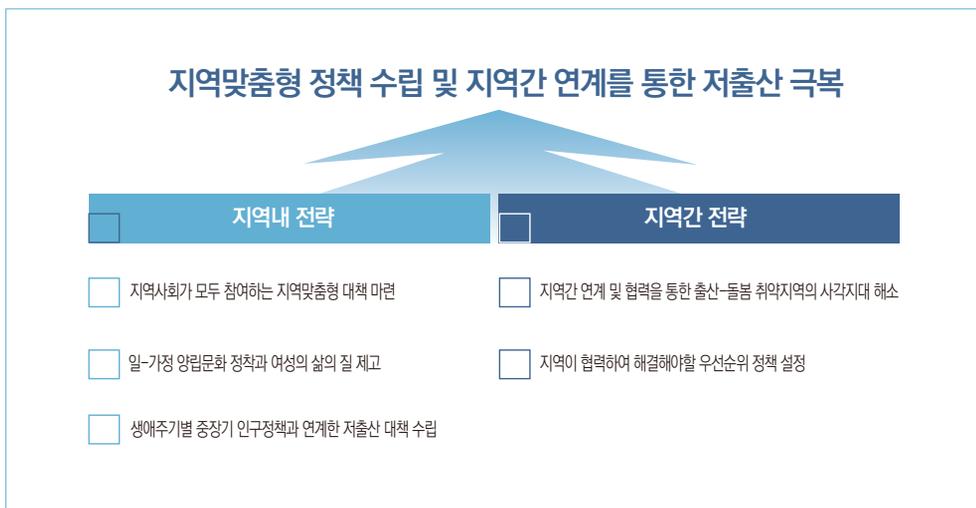
### ■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출산·돌봄 취약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 출산·돌봄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연계사업을 통하여 출산·돌봄 취약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마을기반이나 공유경제를 토대로 한 마을기업형 공동체를 육성하고 이러한 공동체들의 지역간 연계를 통해 전북형 돌봄생태계 구축

### ■ 지역이 협력하여 해결해야할 우선순위 정책 설정

- 지역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해결해야할 우선순위 정책을 선정하여 전북지역이 보편적으로 당면한 저출산 문제(청년일자리 등)를 해결
- 이러한 지역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산 담당자, 지역주민,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초(超)지역적 저출산 네트워크 구축

## Ⅰ 저출산 대책 방향성 Ⅰ



## 2 사업 예시

### 🔗 여성 인력 지원 관련

####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여성을 위주로 한 대체인력풀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조직에서만 주로 활용되고 있는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를 민간 기업에도 확산시키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업무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유연근무제 도입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유연근무제 확산을 추진
  - 육아 및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들을 위주로 한 대체인력풀을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
- 세부추진계획
  - 지역 내 취업지원센터(일자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에게 유연근무제 분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대체인력풀 구축
  - 유연근무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을 공모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입에 따른 인력부족을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적으로 배치
- 기대효과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 가능
  -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보장

####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여성의 독박육아 해소

- 추진방향
  -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전북 지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
  -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업 내 장기적인 가족친화적 환경의 정착을 도모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 세부추진계획
  -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
  - 가족친화기업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들의 홍보와 공공기관 구매 시 우선적으로 선정
- 기대효과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을 증진시켜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
  -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정착과 출산 이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육아 지원 관련

### ■ 마을기업형 돌봄공동체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이나 공유경제를 토대로 형성된 협동조합 등의 인프라 형성이 특화된 지역
  -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반 돌봄공동체를 형성하여 초등돌봄 절벽, 여성의 독박육아 등을 해결
- 추진방향
  - 지역사회 내 돌봄 커뮤니티 형성과 양육자를 위한 자치활동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시설, 제도시행 관련 조례제정과 공동육아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 공동육아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참여를 유도

- 지역의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책 집행자와 기획자의 역할 수행

- 세부추진계획

- 마을·아파트 단위 유희 및 공용 공간에 초등 방과 후 돌봄터를 조성하여 출퇴근시간, 부모 개인적 시간 이용시 일시적 또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운영방식에 따라 주민자치형, 직장형, 기관지원형, 도시지역형, 농촌거점형 등으로 구분하여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돌봄공동체를 지원

- 기대효과

- 취업모의 초등돌봄 절벽을 해소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육아지원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 공동체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전 복형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

## ■ 공보육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전북의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읍면동 기준으로 68곳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실정
- 따라서,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품질 제고

- 추진방향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이 낮은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지역 내 유희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여 공보육 시스템 확충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보육교직원 교육·컨설팅 등 시행

- 세부추진계획

- 육아취약지역(농산어촌)에 적합한 공립 유치원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의 유희지역 또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을 추진

- 공공·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보육교사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열린어린이집(부모참여), 물품 공동구매, 회계관리 등 투명하고 열린 운영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육 품질관리 강화
- 기대효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공보육의 질 향상
  - 민간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 강화

## 시설 지원 관련

### ■ 전복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지역 내 정주인구를 늘리고 보금자리 마련
- 추진방향
  -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들을 중점적으로 입주 추진
  - 전세임대 주택과 빈집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청년·예비부부에게 주거 제공
- 세부추진계획
  - 공유지에 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
  - 지역 내 빈집, 전세임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예비부부에게 제공
- 기대효과
  - 무주택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 ■ 여성 삶 보장센터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가임여성 인구비율, 여성에게 집중된 독박육아, 20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하여 여성인구의 절대적인 인구수가 적음
  -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친화적인 지역으로 변모하여 여성인구의 유입을 도모
- 추진방향
  - 교육, 취업, 사회참여, 결혼, 출산, 복직 등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
- 세부추진계획
  - 여성 삶 보장센터를 건립하여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상담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생활밀착형 바우처를 지급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장려금, 취업 후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의한 양성평등 달성
  - 여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전북으로의 여성인구 유입 활성화

## 🔗 교육 지원 관련

### ■ 아이들의 창의적 놀이공간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인 놀이공간 제공
- 추진방향
  - 지역 내 유휴지역, 빈집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창의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요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충족

- 아이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 특히 양육부모들의 소통공간도 조성하여 지역거점형 정보와 소통 교류의 공간을 제공
- 세부추진계획
  -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실내 놀이터, 북카페, 놀이책방, 다목적실 등)과 자연과 연계한 숲놀이터 등을 조성
  - 창의놀이공간에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방문을 장려하고 소통공간 제공
- 기대효과
  - 아이들의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정서 및 심신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
  - 아이들에게는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창의적인 발달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

## ■ 전북형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육환경(공교육 및 사교육)이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게끔 영향을 미침
  - 출산 이후에도 아이의 성장을 전북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대도시(서울, 부산)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
- 추진방향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교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의결하는 지역단위 공동체 형성
  - 마을단위의 지역교육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지역 간 교육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주도하여 조례 및 제도 개선
- 세부추진계획
  - 교육협동조합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북형 지역교육공동체 로드맵 구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 취약지역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우수교원 배치, 혁신학교 지정, 학교시설 현대화 등),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의결하는 위원회에 지역교육공동체의 참여 보장
-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우수교사 순환근무, 혁신학교 조성,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교육공동체간 연계와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취약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여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이후 아이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 충족

## 🔗 기타

### ■ 입양가정 및 이민가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인구의 자연증감량을 늘리기 위한 단편적인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넘어 적극적인 다문화 가정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 추진방향
  - 입양가정 및 이민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용이한 사회통합 실현
- 세부추진계획
  - 입양아동 가정에 대한 생애주기별 양육·교육·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을 돕고 생활안정감을 충족
  -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상담, 가족교육 강화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 형성
- 기대효과
  -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 일차원적인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인구증가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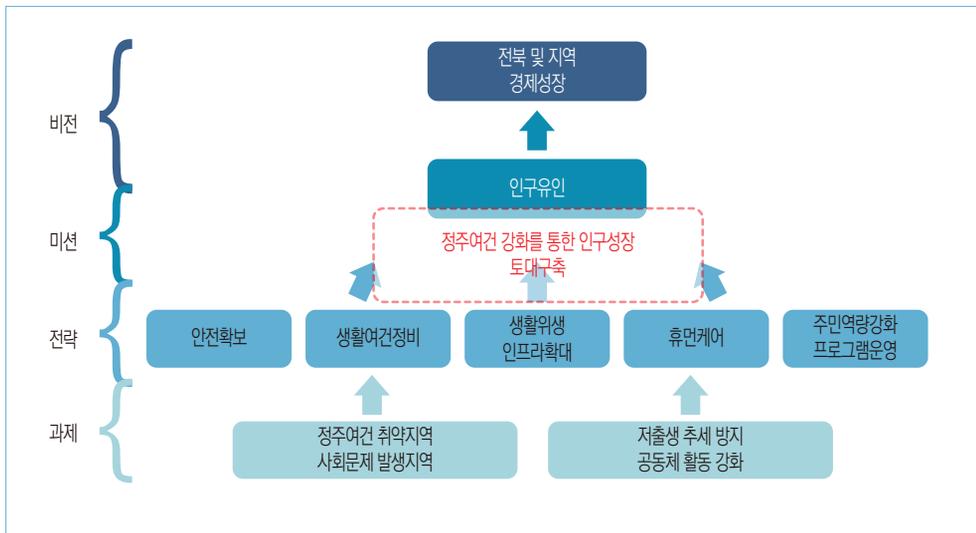
### 3 도/기초/유관기관 협력방안

#### 전북도 운영 방안

##### ■ 전북 저출산 비전 및 미션 설정

- 비전 : 인구활력을 통한 전북 지역경제 성장
- 미션 : 정주여건 강화로 인구유인을 위한 토대 구축
- 전략 : 생활여건 개선, 생활인프라 확대, 안전강화, 저출산 방지 및 고령인구 케어 전북, 민관학 주도 주민역량강화
- 과제 : 취약지역 및 사회문제지역 우선 고려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동체를 활용한 저출산 인식 개선 및 사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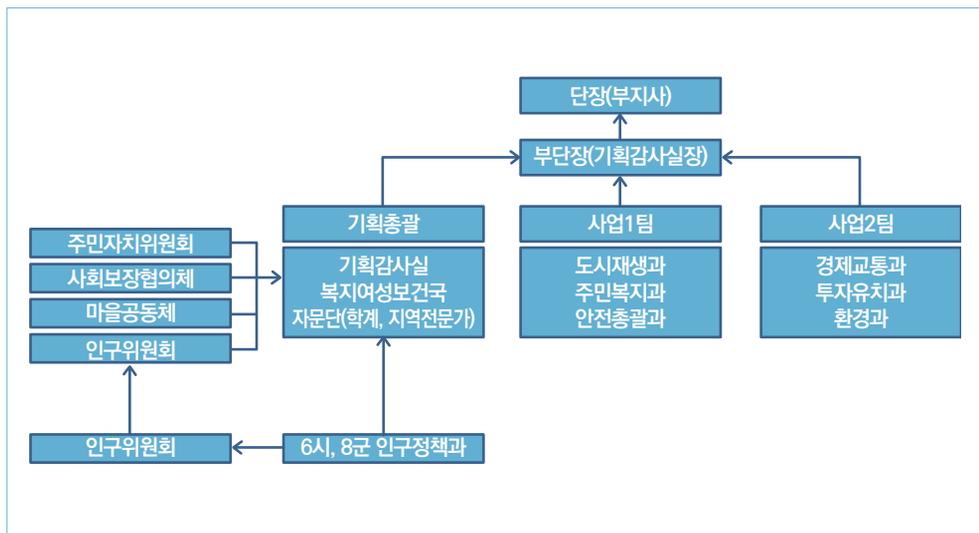
#### Ⅰ 전북 저출산 극복 비전 및 미션 Ⅰ



■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

-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도 및 기초 상호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 증대
  - 단장 : 사업계획 방향제시 및 추진 총괄지휘
  - 부단장 : 실무 총괄
  - 기획총괄팀 : 발전계획 수립 실무총괄, 시안작성 및 검토, 수립 검토
  - 사업1팀 : 하드웨어 분야 단위사업 집행
  - 사업2팀 : 소프트웨어 분야 단위사업 집행
  - 기초(6시, 8군) : 전북도의 방향성 매칭 기초 사업 운영, 기초 인구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북도 사업과의 상호 연계망 구축
- 전북도+기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주민참여적 저출산 대응 실천적 계획 수립
  -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전북 기초 수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별 마중물 사업 추진
  -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단기 및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하드웨어 사업운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성장 유도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Ⅰ 전북 저출산 전담조직 운영 Ⅰ



- 전담조직 보조역할의 행정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운영
  - 전북도 및 기초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자원봉사, 자발적 의견 개진으로 주민참여 독려와 관련 주체들 간의 원활한 합의로 사업진행 주도
  - 주민자치위원회 및 민간협력단체: 통장, 마을기업위원, 봉사단장, 마을주민 등
  - 행정협의회 :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및 인구정책팀 담당 및 실무자, 기초지자체 인구정책과(팀) 담당 및 실무자 주도
  - 자문 및 전문기관 : 관련학과 전문가, (가칭)전북 인구대학
- 인구위원회와의 협업체계 구축
  - 전북도 : 인구위원회 개최, 안건 상정, 비전 및 미션 설정, 전북도-전북 소재 대학 협력 체계 구축
  - 인구위원회 : 전북도 인구 비전 및 미션별 세부 전략 및 과제 도출
  - 대학 : 전북도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성 설정,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구대학 운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연령별/세대별 맞춤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구축
  - 단기적인 측면에서 연령별/세대별 찾아가는 인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안 작성
  - 결혼, 출생, 일자리, 사망까지의 생애주기형 교육 프로그램안 작성
- 전북 소재 대학과 연계한 인구대학 운영
  - 인구경제, 인구계획, 도시공학 및 계획, 사회학, 경제학 등 인구관련 전공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안 작성
  - 대학간 연계를 통한 전북 인구대학 운영(도청 소재)
  - 인구대학 내 프로그램을 통한 인구계획사(안) 양성 및 권역 및 지역별 자체 교육 실시

- 인구지표 구성을 위한 협업 체계구축
  - 인구 증감 변화에 따른 차등적 지역 정책안 투입을 위한 인구지표안 구성
  - 지역별 차등화 정책의 개발을 통한 단기 및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 인구상황판 구축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시군별/읍면동별 인구상황판 구축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전북도의 독립과업(자체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 및 확보**
- 자체재원(도, 시·군) 및 기타재원 확보 방안
  - 국비 매칭을 위한 사전적인 차원에서의 인구계획 및 인구 증대 조성사업 도비 및 시군비 확보
  -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유치로 파급되는 지역경제효과를 활용하여 산출되는 직접 및 간접세를 인구 증대 조성사업 자원으로 활용
- 사업공간(부지, 건물 등) 확보 방안
  - 향후 인프라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노력 경주
  - 전북도 및 시군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확보
  - 인구장기계획에 근거한 인구 관련 사업의 성격 및 유형별 구분과 유형별 유휴 부지 확보를 사전적으로 추진
- **전북형 저출산 특별회계 운영**
- 전북 저출산 및 저출생 관련 사업 리스트 구축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관련 사업 DB화 추진
  - 예산 투입형, 지역(공동체) 주도 해결형, 인식개선형, 정주여건 및 환경개선형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사업/예산투입 특성에 따른 사업 구분
  - 기존 사업의 DB를 활용하여 사업의 특성 구분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근거 확보
  - 단기 : 예산 투입형, 지역(공동체) 주도 해결형
  - 중장기 : 인식개선형, 정주여건 및 환경개선형

- 인구 증감과 예산과의 연관관계 우선 파악
  - 인구 변화에 따른 총 인구증감에 영향을 주는 유무형의 복지서비스 예산과의 연관관계 제시
  - 연령별 및 세대별 인구변화 수요에 연계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개발로 향후 과투자 방지 및 수요 연령 및 세대에 맞는 예산안 구축
- 지역균형발전회계(지역지원계정) 외 지자체 저출산 사업 수요에 맞는 예산 총량 계산
  - 향후 예측을 통한 기대(expected) 예산안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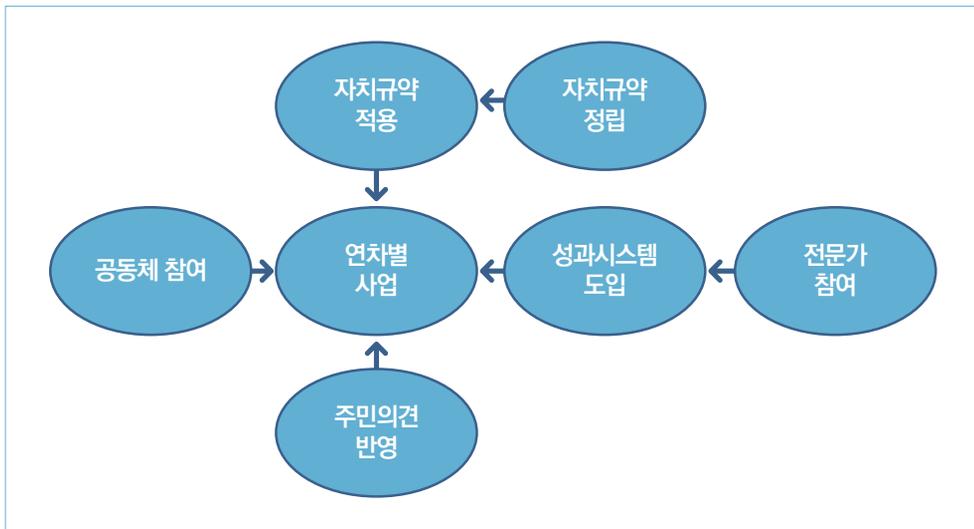
#### ■ 다부처·다년도 사업과의 연계 추진

- 저출산 및 저출생 대상 사업의 추진 효율성 확보를 위한 다부처·다년도 연계사업의 운영
  - 전북 지역 여건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포괄보조 지원 사업 운영
  - 부처별 단위사업의 특성별/지역별 연계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
- 저출산 및 저출생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지양으로 향후 지속 운영이 가능한 스타사업의 도출
  - 저출산 및 저출생 발생의 원인(결정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원인 파악 및 DB화
  - 더불어, 저출산 및 저출생의 결과는 일방향적인 결과만을 유도하지 않고 상호인과관계 하에서의 원인-결과가 존재하며, 전북도 지역경제로의 파급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
- 부처별 스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저출산 및 저출생 사업의 현실화
  - 저출산 및 저출생 관련 사업은 생활편의 개선,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증대와 밀접한 관계를 인지하여 관련 부처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지역별 적용 주도
  - 더불어, 인구관련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의 운영이나, 일시적인 사업의 운영으로 달성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운영

■ 민관산학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사후관리 시행

-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 주민주도 공동체 구성으로 민, 관, 산, 학이 협업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의 관리를 통해 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 더불어 산업(사업체)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로 규모 및 집적의 경제 구축
  - 관련과는 사업의 계획 검토 및 집행 총괄, 계획 반영, 운영비 회계 관리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자발적인 사업계획 및 참여
  - 마을공동체에 의한 주민주도 마을 자생 방안을 적용한 사업 계획 작성
  - 공동체 및 민간단체에 의한 귀농귀촌 상담, 교육, 홍보 추진
- 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
  - 자치규약, 주민의견, 공동체, 성과시스템, 전문가참여로 사업의 연차별 관리 수행

Ⅰ 주체별 사후관리 관계 Ⅰ



- 마을자치규약 적극 활용
  -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가꾸기가 가능하도록 주민자치규약 체결을 통한 프로그램 내 운영 및 사후관리 교육 실시
- 전문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지속적 운영점검 진행
  - 사업추진 과정 중 시설 운영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전문기관 주관 하에 사업운영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및 강화
  - 연차별 및 주체별 성과평가를 적용하여 인구증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확보를 성과중심으로 단계별 평가로 개발-추진-점검-환류 프로세스 형성
  - 사업운영평가의 타당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점방식 개발 적용

### I 성과관리 평가지표(안) I

분야	평가지표
사업형성	1-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2. 사업과 지역여건의 부합성
사업집행	2-1. 사업집행 실적
	2-2. 사업집행 중의 문제해결 실적
사업결과	3-1. 사업목표의 달성 실적
	3-2. 지역 관심 증대
	3-3. 지역의 변화
	3-4. 인구변화 및 인구변화 가능성

- 인구증대공동체사업단설치
  - 대상지역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추진해나가기 위해 갈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설치된 민간과 관의 융합형 전담조직 형성
  - 지역수요 적합성, 실현가능성, 참여성 등을 기준으로 주민눈높이의 사업발굴, 사업부문과 사업공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메뉴 의견 개진 등 지원

## ■ 인구조표 구성을 통한 인구평가 실시

- 지자체별 인구상황판을 활용한 인구조표 구성
  - 지자체/읍면동별 인구상황판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적 차원에서의 인구조표안 구축
  - 인구조표안은 인구, 생활, 물가, 교통, 환경, 일자리, 문화, 복지 등으로 구성
  - 기존 실시하고 있는 전북 사회지표 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전북도의 인구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사전에 파악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인구특성을 유형화 할 수 있는 유형화안 구성
  - 전북 14개 시군의 인구특성에 따라 대응 정도별 유형화 기준 설정
  - 일반적인 유형화는 4분류에 의해 구축되며, 인구증가, 인구안정, 인구감소 우려, 인구감소 위기 지역(안)으로 유형화 실시
- 유형화 시군별 차등화된 지원 정책안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투입 정책의 개발
  - 인구위원회 및 지역대학과의 연계 협력으로 투입 정책안 구축
  - 인구증가 및 안정 지역에는 장기적인 인구 유지 및 증가 정책안 투입
  - 인구감소 우려 및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안 투입

## 🔗 기초 협력 방안

### ■ 인구위원회 협업

- 기초별 인구위원회 구성
  - 지역 대학·관 협업에 의한 인구위원회 구성
  - 14개 시군별 인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14개 시군별 인구위원회의 상위 위원회인 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인구위원회에 기초한 기초지자체 인구계획 설정
  - 지자체 특성에 맞게 중기(5년), 장기(10년) 인구계획안 공표

- 인구위원회 중심의 사업 개발 및 프로그램 구축
  - 인구위원회 개별 위원 특성에 맞는 전북 사업 개발
  - 대주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안 구성

#### ■ 도·기초 업무 연계

- 전북도의 장기 저출산 및 저출생 방향 파악 및 기초 지자체별 방향 설정
  - 기초 지자체는 인구위원회와 협업하여 방향성을 설정하며, 인구계획의 분야는 경제, 주거·생활, 교통, 교육, 일자리, 복지, 문화·예술, 인구유입·유출,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의 범위에 대한 사업 개발
- 전북도 사업 부서와의 1:1 매칭을 통한 TF 운영
  - 저출산, 다문화, 고령화, 일자리, 생활환경 관련 부서별 TF 운영

#### ■ 도사업 연계 및 지자체별 특성 사업 운영

- 전북도 메가 사업과의 연계
  - 인구계획에 기초한 전북도의 사업 운영은 향후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및 소비 유발을 통한 궁극적인 지역발전을 유발함
  - 따라서, 기초 지자체별 인구계획에 근간한 관련 사업 개발 및 우수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 전북도 메가사업과 연계한 지자체별 특성 사업 운영
  - 기본적으로 출생, 사망, 유입, 유출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구분을 선제적으로 파악
  - 4대 인구변화 요인에 대한 지자체 사업 구분으로 출생 감소 및 유출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파악하여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안을 제시

#### ■ 지자체 인구상황판 운영

- 총체적 인구 변화 및 지역별 인구 변화에 대한 플랫폼 구축
  - 인구상황판의 구성은 전북/시군/읍면동으로 구성
  - 기존 공표된 인구예측 외에 전북형 인구계획 구축

- 예측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든 전복사업의 기초 자료로 반영
- 즉, 인구에 기반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기초별 인구 연령 및 세대별 인구 변화 제시
  - 인구 예측은 총량적인 인구예측 외에 연령, 세대별, 가구별(1인가구 포함) 등의 인구 예측 실시
- 기초 지자체 읍면동 인구 현황 및 향후 인구 예측 제시
  - 전복형 인구 예측 모형 구축
  - 읍면동 인구예측을 통해 해당 행정구역별 수요 서비스 발굴 토대 구축
- 인구상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인구 상황판의 변화를 토대로 장래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 외에 인구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의 도출
  - 인구 상쇄요인 도출 후 가상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지역별/읍면동별 변화 예측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방향 제시 및 업무 연계

## 유관기관 협력 방안

### ■ 주민참여 유도

- 협력적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협력 운영
  -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인구사업 계획 공유, 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주민 인터뷰의 지속적인 실시로 인구계획에 대한 수요 확보 및 반영 토대 구축
- 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축 및 운영
  - 전복 특성 중 하나인 활발한 마을공동체를 활용함으로써 현황 파악 및 연계 사업 발굴, 세부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규약 제정 및 적용
  - 취약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자발적 참여로 더불어 잘 사는 마을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규약을 제정과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에 주민참여 지속 방안 마련

- 분쟁조정 기구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주민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기관으로 지역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 수행
  -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이 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
- 나눔문화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민·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복지자원을 발굴 및 나눔문화 정착
- 사회적경제와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
  -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농어촌공동체, 마을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사회적혁신생태계(안) 조성
  - 마을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지역 자원이 공동 이용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및 생활 편의 시너지 창출

#### ■ 민간기업 및 지역금융기관 등과 협력방안

- 최근 우체국금융 지역발전사업 지원 정책 적극 활용
  -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기여사업으로 고려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을 시범적용 추진(2018년 5월 기준 추진 中)
- 농축협과 연계한 지역발전 사업 개발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구축
  - 농축협,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사업 추진
  - 전북 특산물과 농축협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 개척
- 기계회를 활용하여 전북 및 기초 지자체의 점진적 개조
  - 신규사업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자체적인 연계협력 확보
  - 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연계하여 반영함으로써 단독 및 단일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극복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연계 추진

- 다부처 사업과 인구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규모 및 집적의 경제 반영
- 연계 및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간 연계점 및 상호 보완점 발굴
- 기존 인구감소 및 저출산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으로 선제적 개선 반영
  - 2019년부터 시행되는 계획계약제도 대응 전북형 연계협력 사업 발굴
  -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인구상황판에 근거하며 전북도 및 시군별 주력 및 특성사업에 기반한 신규 사업 개발

■ 인구대학 설립 및 운영

- 지역 기업 및 지역대학 연계 인구대학 설립
  - 인구대학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구 증가 유인 발굴 및 인식 개선교육 실시
- 연령별/계층별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기존 남성 및 산모 대상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 거점별 인구대학 운영
  - 단기적으로 시부 및 군부 차별성을 고려한 거점 인구대학 운영
  - 장기적으로 14개 시군 대상 기초 인구대학 운영
  - 지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용

참고문헌

- 강영주·김창호 (2017).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종훈 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 박종서 외 (2011).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8).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이성한 (2018). 저출산·육아지원대책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147-166.
- 안기훈 (2018). 국가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례집, 67-70.
- 양정선·이나연 (2015). 「제3차 경기도 저출산대책 기본계획(2016~2020) 수립 연구」.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양준호 외 (2016). 「학교와 지역간 마을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인천교육과학연구원
- 전광희 (2018). 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29(1), 219-237.
- 전라북도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2018년 전라북도 시행계획」.
- 조경옥·이주연 (2018). 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  
[Jthink] Issue Briefing 169. 전북연구원.
- 채창균 외 (2017). 「도시 내 교육격차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2017).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2018~2022)」.